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2015.06.19

정 운 찬

(前 국무총리·서울대학교 총장 /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I. 한국경제의 명암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나 그것에 접근한 오직 7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6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그리고 이태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경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때문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8.6%, 90년대에는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20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바로 전 0.27이던 지니계수가 0.35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삼성·현대·LG·SK 등 4대재벌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이제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이 값은 1980년대 초에는 20%였고 지금부터 10년 전만해도 40%였습니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외 충격에 더 취약해졌을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¹⁾. 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던 Dynamic Korea가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쇠약해짐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경제의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는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로 기업투자가 늘어나기를,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개인소비가 늘어나기를 각각 기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소득은 증가를 유도하기 힘들 뿐 아니라 소득이 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극화 완화나 성장잠재력 확

1) 맥킨지는 한국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McKinsey Global Institute,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April 2013)를 참조하십시오.

층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경제의 밝은 면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해야합니다. 먼저 과거 한국경제를 크게 성장시킨 요인부터 따져봅시다.

첫째,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가 핵심적이었습니다. 주요 천연자원은 물론 축적된 물적자본도 없었던 한국으로서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석봉의 유명한 일화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교육열은 그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한국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데 지극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열의가 모여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하면 된다'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 공동체를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남녀들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먼 타국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현지 경제뿐 아니라 한국경제 또한 발전시켰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인들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갔으며, 서독 경제의 부흥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에 감탄한 서독 정부는 상당액의 개발차관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받은 최초의 개발차관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중동의 건설붐을 타고 많은 한국 건설 노동자는 이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과 개발계획 수립을 도왔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은 임금을 고국으로 송금했으며, 그 덕분에 가족들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과감한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했기에 강력한 국민적 결속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은 어디서 유래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 정부 주도의 본격적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선성장·후분배에 입각한 경제성장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수출이나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선도부문으로 먼저 육성하고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

되기를 기대하는 불균형 성장전략,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에 의존해왔습니다.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고 분배와 형평은 부차적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불균형 성장전략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고착되었고,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이 각기 양극화를 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분배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회자되더니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임금 없는 성장'의 문제를 경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 내수가 줄어드니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타격이 큼니다. 쌓이는 재고로 이들의 투자는 부진합니다. 수출 대기업의 뛰어난 성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행된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정보화는 한국사회 특유의 갑을관계 문화와 겹쳐 국내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출과 내수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국내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양극화 심화 ⇒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 누적 ⇒ 내수 부진 ⇒ 성장 둔화 ⇒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한국경제에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은 지금까지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선성장·후분배의 관성 또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확립된 불공정한 분배 관행과 기존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둔화를 피할 길

이 없습니다. 동반성장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II. 단기적 성장전략: 동반성장

동반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몰라도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있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없는 이 들한테 나누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구조도 고치자는 것입니다.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동반성장은 기업들의 이익 극대화에 저해되는 것이니 자본주의와 반대된다. 솔직히 말해 사회주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자본주의를 잘못 배운 결과입니다.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목전(目前)의 이익 극대화를 통해 주가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이는 주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는 근로자들도 있고 납품·협력업체들도 있으며 고객도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 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이 모두 극대화되어야 그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과 납품·협력업체, 고객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 그 회사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극대화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걸쳐 설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들에게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반성장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동반성장의 경제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

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순환이라고 합니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입니다.

II.1 동반성장의 원리: 국민경제의 선순환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낙수효과(top-down track)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왔습니다. 처음에 이 전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져 있습니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합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기치와 함께 재벌개혁이나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과 같은 대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낙수효과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60~70년대의 한국경제가 경험했듯이, 저개발 상태에서는 소수의 선도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정도의 편법까지 용인해주는 것이,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를 통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이야말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둘째로, 하도급 중소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 ·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 올 것입니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략하는 폐단을 낳았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track)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의 효과를 낳아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실천하기 쉬운 것들부터 따져봅시다. 우선, 초과이익공유(협력이익배분)를 실행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상적인 것입니다.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첫 작품이었는데 세상에 알려짐과 동시에 곳곳에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에서 나온 비난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중소기업의 생존,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줄 알면서도 그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는커녕 꼬투리나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과이익공유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협력중소기업들과의 관계를 '협력'관계가 아닌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 받는 관계라 하여 대기업-협력중소기업의 관계를 일반적인 판매자-소비자 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은 판매자-소비자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상대하는 하나의 큰 공동주체인 것입니다. 즉, [(협력중소기업 <-> 대기업 <-> 소비자]의 관계가 아닌 [(협력중소기업+대기업) <-> 소비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종의 TV를 판매하는 삼성과 LG에게 서로 초과이익을 공유하라고 한다면 이는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이러한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그 대기업과 경쟁하는 업체가 아니며 협력중소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수족이 되어 한 부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로서 대기

업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위해 일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반시장경제적이기는 커녕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성과를 이룬 중소기업에게 그 기여도에 따라 초과이익을 공유하고 배분하는 것 또한 반시장경제적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초과이익공유제는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이윤분배를 가능케하여 시장경제의 병폐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이 더 이상 지내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 확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참여 금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조적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결부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을 아래에서라면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이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조치들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좋은 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자금 용자에 혜택을 준다거나 군복무에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가기관, 예를 들면 KOTRA가 대학,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자금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어야 합니다.

II.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함과 동시에 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계층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은 잦은 이직을 통해 숙련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에 결정적 장애가 됩니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 관행은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국민을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정·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과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동정책 사이의 유기적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컨대, 원사업자의 공정거래 의무를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3차 협력업체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도급법 체계를 개선하고, 초과이익공유(협력이익배분)도 2·3차 협력업체로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201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고, 금년의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낮습니다. 5년 정도의 시한을 정하여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임금소득 증가는 내수를 자극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한계 중소기업의 고용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상의 지원책도 동시에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증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해서는 물론, 동반성장 시책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정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조세체계, 그리고 현 정부의 간접 증세 기조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합니다. 물론 증세를 좋아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은 증세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조세부담률 또는 사회보장세를 합한 국민부담률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간접 증세와 직접 증세는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별 구성과 세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계의 합리적 연구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복지부동하는 여야 정치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합니다.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

이상에서 말한 동반성장의 원리와 시책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한국경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투자가 부진하였습니다.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으나 투자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증진을 위해서 대기업에는 첨단, 핵심기술을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연구 및 개발 (R&D)의 방향전환, 즉 D에서 R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R&D 지출이 절대적으로는 세계 5위이고, GDP 대비로는 1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D지출이고 R지출은 보잘 것 없을 뿐 아니라 R이 연구(research)보다는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임(refinement)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D로부터 R 특히 research로의 방향전환이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많은 한국경제 관찰자들은 한국의 R&D는 너무 정부주도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현정부가 자신의 활동 영역을 '창조 네트워크'의 구성에 국한하지 않고 '창조경제'를 기치로 자원배분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시장에 모럴해저드와 자원배분 왜곡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도 위에서 제안한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통해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

생산-고용-소비증가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나아가 경제 전체의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둘째, 동반성장은 중소기업이 성장에서 대기업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자와 빈자,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양극화된 사회는 경제적 효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은 약자들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사후적 복지수요를 줄이는 사전적 복지제도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진리는 첫째 단계에서 조롱당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심한 반대에 부딪치며, 셋째 단계에서야 비로소 자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동반성장론이 지난 수년간 쇼펜하우어의 첫째와 둘째 단계를 거쳐 이제는 셋째 단계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각 경제주체들이 상호 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동반성장은 영영 이상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속에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와 중소기업의 자조가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동반성장은 20세기와 구분되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Zeitgeist)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되어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반성장은 기업과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자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근본 가치입니다.

Ⅲ. 장기적 성장전략: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교육투자를 통해 육성한 인적자원이 과거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다

면 어떻게 미래의 지속적 발전을 책임질 인재들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바로 우수한 교육입니다.

먼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양극화가 고착되고 그에 따라 심신의 스트레스가 과중한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당당한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육체적 힘을 키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제 믿음입니다.²⁾ 영국의 이튼 칼리지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학생들에게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힌 채 차가운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방문객에게 체육교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 지도자들을 기르는 방식입니다. 19세기 총리들은 대부분 이튼 졸업생들이었죠. 하나같이 키 크고 강한 사나이들로, 빅토리아 여왕 재위 기간에 대영제국을 건설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자 약해 빠진 사람들이 총리가 돼서 대영제국은 패권을 미국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 강사가 농담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의 말 일부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창의력은 육체적 힘만큼 또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로서, 교육이 새로운 세대에 함양해야 하는 특성입니다. 새롭게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일컫는 창의력은 특히 연구개발 부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은 최첨단 투자사업의 설계 및 실행에 필수적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 재직 중에 서울대는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법을 지식전달에서 지식창출로 변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이를 향상하며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문 과정을 재설계했습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기초과학 및 교양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인종 및 민족 · 성과 성차별 · 탈식민주의 등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핵심과목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학생

2) 이 부분은 존 로크가 저술한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1690)을 참조했습니다. 이 책은 박혜원, 「교육론」, 비봉출판사, 2011로 번역되었습니다.

대 교수 비율을 낮췄습니다. 국가경제와 마찬가지로, 지난날 한국의 교육은 성장에 치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는 200개의 4년제 대학과 160개의 2년제 대학이 있으며, 대학생은 전체 인구의 4% 전후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더 이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산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개혁중 하나는 바로 대다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숫자와 규모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한층 내실 있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대학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신입생의 1/4~1/3을 전국에서 골고루 선발함으로써 전체 학생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과 교수진 모두에게 보다 광범위한 간접경험을 가능케 합니다. 개인들의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을 지식의 전달자로부터 지식의 창조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색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이것을 자극하는 것이은 폭넓은 간접경험입니다. 대학이 지식의 창조자로 기능할 때 비로소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를 공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수한 교육이란 또 낯선 상황, 나아가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일찍부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과 융통성을 겸비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감과 융통성이야말로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이들이 효율적으로 성공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만약 학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특성을 길러줄 만큼 양호하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한지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언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특히 모국어는 도목수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연장통과도 같습니다. 언어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명료한 사고는 설득력 있는 추론을 가능케 해주며, 추론이 모여 사상체계를 형성하고, 사상체계가 모여서 마침내 하나의 문화가 이룩됩니다. 활력 있는 문화 없이 그 어느 사회도 일류 제도를 구비하고 번창할 수 없습니

다. 언어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교 졸업 이후에도 평생 동안 읽고, 말하고, 써야 합니다.

끝으로,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일은 곧 훌륭한 사람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묻는 일과 유리된 지식은 한번 써먹고 마는 소모품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잘 나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필경 남에게 질시와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며, 결코 어디에서도 존중받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Ⅲ.2 사회혁신

우리 사회가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성장잠재력도 떨어진 근저에는 단순히 경제성장 전략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질서 자체가 서서히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맨 밑바닥에 불의와 부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꼈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 상식이 먹혀들지 않는 사회, 그리고 그 밑바닥에 공간 데 없이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부패구조였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더불어 살기” 보다는 “끼리끼리 살기”를 추구하고, 힘없는 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기 보다는 힘있는 자를 위해 불의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커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였던 “보다 나은 미래, 더 잘사는 사회”는 사라지고, “그들만의 잔치, 비상구가 없는 사회”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 할머니나 부모가 부자인 사람”은 맞선 시장에서도 환영받지만, 가진 것이 개인의 능력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을 펼칠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결혼도, 취업도 할 수 없고,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너무도 일찍 온 몸으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좌절하고 병들어갈 때, 우리 사회의 미래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정과 부패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정과 부패의 구조는 우리 사회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돈 주는 기업인, 돈 받는 공무원, 이권을 추구하는 정치, 기득권에

안주하는 언론계와 학계, 정의에 눈 감은 사법부, 도그마에 빠진 종교계 등이 우리 사회의 솔직한 단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면 가장 먼저 정치권을 떠올립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부패의 문제에 과연 정치권이 가장 선두에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권의 부패를 거론하는 것이 다른 부문의 부패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교육계는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사학재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장수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에 조금이라도 개혁의 칼끝을 넣으려고 했던 정권은 모두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자유스럽고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은 가장 권위적이며 위선적이기까지 합니다.

법조계는 어떻습니까? 몇몇 대형 로펌은 재벌 못지않은 권력과 부를 축적한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생산적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멍니다. 왜 고위 관료들이 퇴직하면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판사와 검사들이 퇴직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몇십억원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산하단체에 이권을 챙겨 주고, 퇴직하면 그것을 향유하는 구조가 이제는 너무나 만연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좋을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태는 우연히도 그 빙산의 일각을 보여 주었을 뿐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화해와 평화가 “정의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